



주간통일정세 2014-12(2014.03.17~03.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1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인사 등 논의(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재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인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됐다"고 밝힘.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인민군대의 사업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비행훈련 참관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영접함.

-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대동 모란봉악단 관람(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대동하고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김여정 순으로 수행 간부를 소개함.

- **北 박봉주 총리, 평남 발전소·제철소 시찰(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에 있는 북창화력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박봉주 총리는 북창화력연합기업소를 둘러보고 협의회를 열어 전력 증산과 기업소에 대한 원료·자재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도 철강재 생산 방안 등을 토의함.



- **北 김정은, 해군·공군 대학 간 사격경기 관람(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의 교직원 사격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군대학과 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성적이 얼마 전에 진행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성적에 비해 높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사격경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정철 군 보위사령관,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함께 함.

- **北,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기계공장 방문 "연구개발로 제품 질 높여야"(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계공장을 시찰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강태호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홍영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동행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현대식병원 시찰...환자 손잡고 "건강하라"(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건설한)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구강병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선전하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지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옥류아동병원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옥류아동병원을 세웠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태복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동행함.



- **北신문 "제국주의 사상문화 막을 모기장 쳐야"(3/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 사상문화'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졌다며 이색적인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는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침략의 주역을 놓고있는(수행하는) 제국주의 사상문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침투하면 내부에 '반혁명세력'이 등장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끌어들이는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쳐야 한다"고 밝혔다.
 - 신문은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색깔혁명'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에 물젖고(물들고) 그들의 후원을 받은 반동세력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벌인 범죄적인 반정부운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北 김영남, 방북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면담(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방북 중인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2일 김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한 민니하노프 대통령 일행과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北 김정은, 리설주·김여정과 모란봉악단 관람(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중앙통신은 출연자들이 '반미대결전'을 이끄는 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만을 받드는 무적의 백두산혁명장군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설명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군 장병들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기남·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김정옥·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함께 함.



■ 김정은동향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3.17,중앙통신·중앙방송)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3.17,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동행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종·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7,중앙통신·중앙방송)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3.17,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김여정 등 함께 관람
- 3/1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종합우승)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9,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명식, 리병철, 김영철, 조경철, 박태수, 장동운, 한광상, 황병서 동행
- 3/20, 김정은 黨 제1비서, 강태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3.20,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 황병서, 홍영철 등 동행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현지지도 (3.22,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한광상(당중앙위 부장), 황병서·리재일(당중앙위 제1부부장) 동행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3.23,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영철, 조경철, 리병철, 김기남, 박도춘, 김평해, 한광상, 김경옥, 리재일, 김병호, 김여정 등 동행 관람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모란봉악단 관람(3.23, 중앙통신)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에 위치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3.17,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 50주년을 맞아 '군(郡)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강성국가 건설이 추진되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줄 수 있다'며 '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3.18,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1호(3.12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9일 평양에서 소집(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판문점 시찰 2주년(2012.3.3)' 관련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선군영장이 조국통일의 진두에 서게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세우려는 것은 김정은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통일의지 강조(3.20, 중앙통신)
- '지금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 수행에서 3대혁명소조가 한 몫 단단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호소(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정형 현지 요해(3.22,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정형을 현지에서 요해(3.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태양절(김일성 생일, 4.15)을 맞으며 야영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야영소 운영준비사업을 잘할 데 대한 문제 강조
 - 또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을 돌아보았음.

나. 경제

● 北 노동신문 "郡단위로 지방경제 발전시키자"(3/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 발표 50주년을 맞아 지방 행정단위인 군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독려함.
- 노동신문은 18일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강성국가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다시 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1970~1980년대만 해도 지방공업이 북한 소비품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했다며 "다시 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 떨쳐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 하자"고 독려함.

● **北 경공업 우선... "중공업 시설 가급적 신축 말아야" (3/18, 경제연구;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 계간지 2014년 '경제연구' 1호를 보면 김정은 체제는 중공업을 중시했던 김일성 주석과 달리 경공업 발전을 강조함.
- 이 잡지에 실린 '기본건설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은 "중공업 부문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일부 중요 대상 건설을 내놓고는 새 건설보다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최첨단 기술로 개건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밝힘.
- 또다른 논문은 '경공업 원료, 자재의 국산화는 경공업 발전의 생명선'이라는 논문은 "인민소비품의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그 가짓수를 부단히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벨기에 NGO, 올해 북한 장애인 지원에 12억원 투입 (3/19, 미국의소리 (VOA))**

- 장애인을 돕는 국제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가 올해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에 80만 유로(약 12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 단체의 대북사업 담당자는 올해 예산으로 함경남도 함흥시 정형외과 병원 등 북한의 장애인 의료·재활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VOA에 밝힘.

● **北 신문 "경공업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3/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2면에 게재한 '경공업 전선에서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을 크게 올리자'는 사설에서 "경공업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의 혼연일체를 더욱 철통같이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사설은 경공업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가 중요하며 "경공업 발전에서 큰 몫을 맡은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해 화학, 석탄, 전력 등 연관 단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하여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北, 농경지 확장 '성과' 선전... "냉습지 4만ha 개량" (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북한에서 냉습지 4만여 정보(약 4만여 ha)가 개량됐다고 이는 "알곡 생산계획 수행 방도의 하나"라고 지난 18일 보도함.



● **북한-중국, 5월 나선특구서 상품·기술전시회 개최(3/21, 흑룡강신문)**

- 북한과 중국이 오는 5월 8~12일 북한 나선경제특구에서 양국 간 경제·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품·기술·서비스 전시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중국 흑룡강신문이 21일 보도함.
- 행사 기간에는 북한 경제정책 및 대북무역상품 통관 설명회, 나선특구 외자 유치 설명회, 북·중 경협프로젝트 교류회, 헤이룽장성 기업 대표단의 나선특구 시찰 등이 함께 진행 예정임.

■ 기타 (대내 경제)

- 세포지구 인민군 군인들과 922건설돌격대원들, '14,000여 톤의 소석회와 90,000톤의 유기질 비료' 등 생산(3.18, 중앙방송)
-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벼모판 종합영양제 생산에 주력(3.18, 중앙방송)
- 자강도 등,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주력(3.18,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알루미늄 합금 미끄럼 축받이' 개발(3.18, 중앙통신)
- 과수농장들 사이의 2013년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3월 20일 리명길(「농근맹」 중앙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21, 중앙방송)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아래 단위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 품질검증과 보증을 받고 출하할 것과, 판매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품질감독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3.22, 중앙통신)

다. 군사

● **北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1개월 만에 대장 복귀(3/19,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이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간 사격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장정남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됨.
- 앞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4일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 대회 영상에서는 장정남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했으며, 최전방 1군 단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해 8월 25일 김 제1위원장이 주재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계급 또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30발 발사(3/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오전 4시부터 6시10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발사체의 사거리는 60Km 내외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로켓 발사 장소는 지난 16일 발사 때와 같은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도 사거리로 볼 때 프로그 지대지 로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주말새벽 이틀연속 단거리로켓 발사...오늘 또 16발(3/23, 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오전 0시52분부터 2시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북한은 오늘 2회에 걸쳐 로켓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60km로 내외로 분석됐다"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신형 고속 침투선박 건조...동해안서 첫 시험(3/23, 연합뉴스)**

-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해상전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수부대를 태우고 해안으로 기습침투할 수 있는 신형 고속 침투선박(VSV)을 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특수부대의 해상 기습침투 능력을 높이려고 작년부터 고속 침투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이 고속선박은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해상 침투전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고속선박 건조도 이런 전력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 고속선박이 실전 배치되면 이미 운용 중인 반잠수정(대동-B급)과 함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은 기습침투용 고속선박을 동해함대 예하 전방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우리 군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도록 스텔스 도료를 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올해 첫 황사 경보…"서해안에 영향"(3/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황사 경보'를 전한다며 "16일 몽골 중부와 고비사막,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발생한 황사는 17일 밤부터 서해안 지방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 **"北, 2001년 이후 산림 16만ha 유실"(3/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2001년 이후 16만ha의 산림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WRI)를 인용해 18일 전함.
 - WRI는 최근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에서 2001~2012년 북한에서 유실된 산림이 16만ha이지만 새로 조성된 산림은 1만 3천ha에 불과했다고 밝힘.
 - 지역별로는 개마고원, 자강도 강계 인근의 강남산맥, 양강도 마천령산맥의 산림 유실이 가장 심했으며 함경남도 함주군과 평안북도 창성군, 함경북도 어랑군과 화성군 등의 산악지역에서도 산림 유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美 단체, 내달 평양 결핵연수원 완공"(3/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4월 초 북한 평양에서 결핵 연수원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이 단체는 지난 주말 결핵연수원 완공을 위한 전문가들을 평양에 파견했고, 이들은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진행 중인 온실 사업과 간염치료 사업 등 다른 대북사업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청춘거리 체육촌 리모델링 완료…"김정은의 선물"(3/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의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9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방송들은 실내경기장과 축구경기장, 신체훈련장과 체육인 식당 등을 갖춘 체육촌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라며 김 제1위원장이 준 "사랑의 선물"이라고 선전함.

- **北 '기술혁신의 기수로 3대 혁명소조 부각 눈길(3/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이날부터 평양에서 제4차 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가 열린다며 전시회에 출품될 전시품들은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비상한 신념과 의지, 높은 실력과 불 같은 열정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치켜세움.
 - 이어 "소조원들은 파견단위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여 현실에



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고 단위의 면모를 최첨단 수준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독려함.

- "재미동포 의사 20여명, 5월 의료지원 방북"(3/21,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한인단체 '조미의학과교류촉진회' 박문재 회장은 미국의 소리(VOA)방송 방송에 오는 5월 3일 의사 20여 명이 방북할 예정이라며 "과거에 (북한에) 가던 재미동포 의사들 외에 이번에는 (교포) 2세 의사들이 여러 명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힘.
 - 박 회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기술, 의료개념, 치료방법을 그분(북한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 한인 1세 의사 5명은 평양의대병원, 제3인민병원, 김만유병원 등을 방문해 환자를 진찰하고, 한인 2세 의사들은 수술 집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경제 관련학과 대거 신설...개발인재 양성 노력(3/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2일 평양발로 북한에서 "대학들의 교육체계를 보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일부 대학들이 신설한 학과를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는 국제경제학과가 생겼고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는 호텔경영학과와 호텔봉사학과가 신설됐으며,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는 관광경제학과, 보험학과, 가격학과, 경제법률학과가 설치되었다고 신문은 전함.
 - 조선신보는 또 "지방에 있는 경공업 대학들을 해당 도들에 필요한 각이한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명에 맞게 명칭을 바꿨다"며 신의주경공업대학이 평북공업대학으로, 해주경공업대학이 황남공업대학으로 개명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사이버대학)이 설치됐고 김형직사범대학 등에는 원격교육학부가 생겼다고 전함.

- 北, 조선중앙은행 등 은행 건물 현대식으로 신축(3/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 6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에서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동북아시아은행의 본점 건물을 각각 대규모로 짓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북-러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에 즈음한 '영화 상영주간', 3월 17일 대동문영화관에서 개막(3.17, 중앙통신)
- 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 평양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3.17, 중앙통신)
-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 준공식, 3.19 서산축구경기장 앞에서 광범기(黨 비서/준공사)·김용진(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9, 중앙방송·중앙통신)
- 제4차 전국 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 3월 20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3.20,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평해(黨 비서),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
- 北 올림픽위원회 총회, 3/20 '리종무'(체육상,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3.20, 중앙통신)
-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 봄철 나무심기 기간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로 600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지도사업을 강화(3.20, 평양방송)
- 위생월간(매년 3월~4월)을 맞아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며 '자기 몸차림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자'고 주장(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3대혁명전시관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현대과학 기술자료들도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3.21, 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 즈음 평양에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진행 예고(3.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9차 각 도(직할시) 과학기술축전, 2.25~3.21 진행(전시회·강의 등) 및 '수천 건의 논문·제품 출시 등 성과' 선전(3.22, 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주러 北 대사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이 선동"(3/17, 러시아의소리; 노동신문)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고 러시아 국영 라디오방송 '러시아의 소리'가 17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열린 북러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 기념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



의 음모 시나리오에 의해 준비된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최근 사건은 분명히 그들의 선동에 의해 자극됐다"라고 말함.

- 한편 노동신문은 '북러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날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의 역사적 계기'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신문은 "전통적인 조로 친선 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평가함.

● 北통신, 성김 北인권 발언 비난... "누워서 침뱉기"(3/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수치스러운 인권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고 "누워서 침뱉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며 "미국은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했잖아 제 망신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김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남한에서 "미군의 폭행사건, 제3국의 공식문서까지 위조한 간첩조작사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범죄들"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김 대사가 이 사건들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함.

● 北, 연일 대미 위협... "핵 타격 과녁은 미국"(3/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은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다중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밝힘.

● 북한, 중국에 잇따라 경제사절단 파견(3/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중국에 전시·관광 분야 사절단을 잇달아 보내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앞선 기법을 배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8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丹東)시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조선국제전람사 박웅식 사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15일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CCPIT,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올가을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함.
- 박 사장은 17일 판상(潘爽) 단둥시 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해 단둥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나서 우리 유관 부문은 곧바로 국가지도자에게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국가지도자도 이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올해 박람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는 5월 단둥에 준비단을 보내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적십자 대표 "회담에 정부관계자·전문가도 참석"(3/19, 연합뉴스)**
 - 북일 적십자 회담 참석차 1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담에 양국의 여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서기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지난 3일 양국 적십자회담에서 이룩된 이해와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번 회담의 의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라고 설명함.

- **"러, 북한 가스관 건설에 北 채무 활용 추진"(3/2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의 일부를 상환받아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할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스토르차크 차관은 가스관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북한의 일부 채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일본, 국장급 정부간 협상 재개 합의(3/2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정부 간 교섭 재개를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은 20일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부 간 공식회담 재개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회담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한편, 북측 수석대표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쌍방이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함.
 - 그는 또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계속 연락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함.



- **조선신보 "北日 적십자회담은 경제적 계산과 무관"(3/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1일 '조일교착 타개를 위한 착실한 전진'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과 일본이 지난 19~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을 갖고 정부 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조일 간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치협상의 틀거리가 원활하게 복원됐다"고 평가함.
 -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가 이달 10~14일 몽골에서 요코타의 딸 김은경 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조일 쌍방이 고위급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착 타개를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음을 시사해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 조선신보는 "적십자 회담의 개최와 몽골 면회가 실현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경제지원을 바라는 북조선의 내부사정에 초점을 맞춰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함.

- **북한-일본, 30~31일 베이징서 정부 간 공식 협상(3/21,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오는 30~31일 베이징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21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장급 협상에는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함.

- **방북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 무역상과 회담(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21일 리룡남 내각 무역상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방북한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 무역상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 상업회의소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에 관한 합의서조인식에는 리 무역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민니하노프 대통령과 티모닌 대사 등이 참석함.

- **北 신문, 美 인권보고서 비난..."부당한 내정간섭"(3/23,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3일 '규탄배격당하는 인권재판관의 가련한 몰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미국이 또다시 그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중국, 이란, 이집트, 알제리 등 많은 나라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사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 밝힘.



- **北 신문, 한미훈련 겨냥 "美 침략 좌시하지 않을 것"(3/23,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과 이달 27일 시작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 등을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논평은 또 "우리는 이미 다중화된 핵 타격수단의 주된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밝혔다"며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주장함.
 - 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릴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3/23, 조선중앙통신)**
 - 카즈백 타이세프 러시아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이 23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을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짓부셔 버릴 것과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조국통일 투쟁'을 선동(3.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北)가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며 '다중화된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하며 '진정 대화를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을 실천행동으로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등 관련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대로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남북관계에는 결정적 개선국면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며 재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B61-12' 핵폭탄 실험과 핵폭탄을 나토 국가 배치 계획에 대해 "오바마가 떠든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론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세계를 냉전의 회오리, 핵군비 경쟁의 시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난(3.18,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문부과학성 부상의 '고노담화 부정' 관련 "일본의 과거침략사와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강짜를 부린다고 범죄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3.18,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 보고서(北,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등)' 관련 '미국이 亞-太지역에서의 장기주둔뿐 아니라 군사적 패권강화를 위한 군사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再비난(3.19, 중앙통신·민주조선)
- 주북 러시아 대사, 3.19 강석주(내각 부총리)·리룡남(무역상)·궁석웅(외무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초대할 가운데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개최(3.19, 중앙통신)
- 日 수상 아베가 참의원 예산위에서 한 발언(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나 세계정세에 맞추어 새롭고 생기 넘치는 일본을 만들어가고 싶다) 관련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쫓아내고 합법적인 전쟁체제를 가진 국가로 만들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3.20, 평양방송)
- 방북 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 3월 21일 귀국(3.21,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상업회의소와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상공회의소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3월 21일 평양에서 조인(3.21, 중앙통신)
- 리룡남(무역상)과 타타르스탄 대통령, 3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3.21, 중앙통신)
 - 회담에서는 쌍방사이의 무역경제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北, 3월 21일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일행을 위해 연회 마련(3.21, 중앙통신)



- 강석주(내각 부총리/연설), 리룡남(무역상), 궁석웅(외무성 부상), 타타르스탄 대통령(연설) 등 참가
-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루스탐 민니하노프)과 일행, 3월 21일 北-러시아 間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을 즈음하여 평양에 도착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성 김 주한 美대사의 '北 인권' 발언(北의 인권상황 개탄스럽다 등) 관련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중상모독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3.21, 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22 訪北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대통령(루스탐 민니하노프)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2, 평양방송·중앙통신·중앙방송)
- 타타르스탄 대통령 일행, 3.22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22, 중앙통신·평양방송)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용화목과하면 필연적으로 반혁명세력의 대두를 초래하며, 오늘날 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문화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 있다"고 '자본주의 사상문화 유입 차단' 역설(3.2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제의 과거범죄는 국제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 봤자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과거사 인정 및 사죄와 배상' 촉구(3.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이 올해 10월경 핵재처리공장(아오모리縣) 새로 조업(연간사용 핵연료 800t 재처리, 수십 년간 96t 플루토늄 생산) 및 플루토늄 저축·보유(44t) 등 움직임은 "핵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3.22, 평양방송)
- 美육군참모총장(오디어노)의 한반도문제 관련 발언(가장 큰 우려는 오판에 따른 전쟁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화국은 한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해 자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만 도발자들의 침략행위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3.2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나. 북핵

● 中 6자대표 우다웨이 방북...회담재개 논의전망(3/1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우 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 대표는 방북 기간 북한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에 앞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17~2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함.

● **방북 中 6자대표 우다웨이, 김영대 만나(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20일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 대표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했으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유엔총회 의장에 대남 관계개선 노력 소개"(3/18, 연합뉴스)**

- 존 애쉬 유엔총회 의장실은 유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18일 자 성남(59) 신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애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고 있는 조치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자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은 사회복지 확대,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애쉬 의장실은 전함.

● **北방송 "南, 대결분자 단속 바로해야"(3/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8일 논평에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 모임 특강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엄중한 비방중상"이자 "특대형 도발"이라며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유성옥과 같은 악질 대결분자들에 대한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을 바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평양방송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은 엄중한 비방중상에 대해 무조건 사죄하고 그 재발방지를 담보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2007년 제공 경공업 차관 갚아라"...北에 통보(3/21, 연합뉴스)**

-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



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힘.
-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5천만원)이며,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함.
-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개발 협력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현재 가진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차관 조건이 공동 협력 개발의 성과물로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자로 (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량 차관도 향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 통일부 "개성공단 임금 협상, 예년처럼 7월에 해야"(3/21, 연합뉴스)

-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협상을 즉시 시작하지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 '예년처럼 7월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입주기업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관리위원회가 이 의견에 따라서 북측 총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남)

- '3대혁명전시관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현대과학 기술자료들도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3.21, 중앙통신)
- '南 당국을 부추겨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여놓은 미제 호전광들을 통일의 원수, 전쟁의 원흉으로 단죄·규탄한다'며 '남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위력으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선동(3.23,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6자대표 우다웨이 방북...회담재개 논의전망(3/17,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고, 21일 귀국했다고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우 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 대표는 방북 기간 북한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 대표의 방북은 중국이 회담재개를 위한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재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 그러나 북한 매체는 우 대표가 북한에 머문 닷새 동안 6자회담과 직접 관련된 행보는 보도하지 않았음.

- **"北 핵·미사일 실험 임박 징후 없어" <38노스>(3/20,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당장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동해 미사일 발사장 이들 3개 시설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은 북한이 실험 능력을 증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운영하는 '38노스'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준비 동향을 파악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비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분석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함.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북한, 의무 이행 조짐 안보여'(3/18, 미국의소리)**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전화로 이뤄진 정레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입장을 상기시켰음.



- 따라서 이제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이지만,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향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 일본 당국이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사키 대변인은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미 전문가들 "북한, 더 큰 추가 도발 벌일 것"(3/18, 미국의소리)**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6일 미국의소리방송에 이날 북한이 미 사임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향후 도발의 전조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도발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평양주재 영국대사로 근무한 존 에버라드 전 대사로 북한의 최근 도발이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최근 언급한 '핵 억지력' 조치가 4차 핵실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 브루스 벡틀 미국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기술 개발과 유지라고 진단했고,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정치적 이유에서 시기를 조절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북한인권 개선 압박 추가 조치 고려'(3/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서화 할 현지 장치 설립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장치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 활동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 한편 사키 대변인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제네바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소속 인사 등을 만나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 **北, GDP대비 군비지출 세계 1위...병력 4위(3/2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북한의 군비지출액은 57억5천만~98억4천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됐고, 이는 GDP 대비 16.9~2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계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 국가별로 가장 군비지출이 많은 나라는 최강국인 미국으로 7천860억달러에 달했으며, 중국(1천360억~2천700억달러)과 러시아(626억~1천210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276억~384억달러(GDP 대비 2.7%)로 9위에 올랐다.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공개된 관련 자료가 거의



없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군비지출액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중국, 北 미사일 발사에 "각국 긴장국면 완화해야"(3/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단거리 로켓 2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유관 당사국들에 자제하도록 촉구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각방이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욱 많이 해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중국 측이 '각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뿐 아니라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FE) 연습을 본격화한 한국과 미국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긴장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측의 군사훈련으로 긴장수위가 다소 높아졌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함.

- **중국,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에 거부권 시사(3/18,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통과를 거부권을 통해 저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완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 정세하에서 국제사회가 건설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추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 北日 정부간 회담에 "쌍방관계 개선 희망"(3/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오는 30~31일 베이징에서 북일정부 간 공식협상을 한다고 21일 발표한 데 대해 쌍방이 관계를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쌍방이 상호 존중과 소통,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북일 간 국장급 협상에는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함.



라. 일북 관계

- **日 정부 "납북자 전원 귀국해야 대북 지원 가능"(3/18, 연합뉴스)**
 -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커녕 한 푼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후루야 담당상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각료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특히 19~20일 중국 선양에서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회가 열리는 데 대해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을 돌려주는 것이 북일문제 진전의 대전제라는 기본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날 관계 각료회의는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가 10~14일 몽골에서 메구미씨의 딸 김은경씨와 상봉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 **북한-일본 '정부간 교섭 재개' 합의(3/2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회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정부간 교섭 재개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일본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은 이날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부간 공식회담 재개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회담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북측 수석대표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쌍방이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면서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계속 연락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한편 북한과 일본이 오는 30~31일 베이징에서 정부간 공식 협상을 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21일 밝혔다.

- **일본-EU, 北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3/21,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표결은 오는 28일 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교도통신은 북한 인사들을 국제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결의안에 관련 내용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 일본 정부는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한과의 적십자실무회담 계기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북일 정부간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도 병행하는 모양새임.

마. 러·북 관계

● 러, 대북 부채탕감안 의회 비준 '순조'(3/19, 연합뉴스)

- 인터팍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북한이 구 소련 시절 진 11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하는 양국 간 협정 비준안이 러시아 국가두마 예산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언론은 이날 국가두마의 협정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음.
- 비록 지난 해 12월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 앞서 지난 해 11월 한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에 합의해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016년까지 연장' 발효(3/18, 연합뉴스)

-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 19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양국 교환각서가 정식 발효됐음.
- 외교부는 18일 "현행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발효됐다"면서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2010년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해 온 한미 양국은 재처리, 농축 등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계속되자 지난해 4월 현행 협정 만기를 2년 연장기로 한 바 있음.

● 공군참모차장 "공중급유기·차기전투기 연내 계약"(3/22, 연합뉴스)

- 김형철 공군참모차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공군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공군이 도입하려는 공중급유기 및 차기전투기(F-X) 계약을 연내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차기 공중급유기 사업을 위한 경쟁입찰에는 에어버스 A330과 보잉 767 및 보잉 KC-46A 세 기종이 응한 상태라면서 연내 기종 선정이 끝나면



2020년 이전에 한국 공군에 인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차기전투기 기종은 F-35A로 사실상 정하고 이를 40대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며, 김 차장은 아울러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사업도 하반기 본격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나. 한중 관계

● **차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核정상회의서 별도회담(3/20,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25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이미 일정이 공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 어느 나라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핀란드·영국 총리 등과 회담한다고 밝혔음.

● **韓中 FTA 10차 협상 종료... '팽팽한 신경전'(3/21,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종료됐으며, 중국에서 열리는 다음 협상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음.
- 양측은 9차 협상 때 교환한 시장개방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에 참여한 산업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함.
- 우리 측은 중국이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업 부문을 대거 '양허 제외'로 분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은 한국이 농축수산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진정성 조치,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는 것"(3/18,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8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관건으로 꼽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라고 일본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음.
-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냐'는 질문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음.
- 조태영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 구성 등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며, 이밖에 그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음.

● "숨통은 터"...한일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3/21, 연합뉴스)

- 한미일 3자회담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헤이그에서 대면키로 함에 따라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물꼬는 텃다는 분석이 많음.
- 특히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의제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정례 교류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임.
- 한편 일본 언론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데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사이의 첫 회담이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한일, '軍위안부 협의' 조만간 개최...협의내용 주목(3/21,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밝힘에 따라 대표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됨.
- 한일 당국간 위안부 문제 협의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기한 사안으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최근 응답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며, 일본의 이런 입장 전달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우리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음.
- 결과적으로 일본이 국장급 회의 개최 협의에 응한 것이 우리 정부의 한미일 정상회담 수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번에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된 당국간 협의로는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처음 협의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미·중 관계

● 미셸 여사, 中심장부서 "언론자유는 천부의 권리"(3/22, 연합뉴스)

-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22일(현지시간) 베이징대에서 미국 유학생과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연에서 인터넷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언론자유, 종교자유, 종교의 중요성을 동시에 거론했음.
- 미셸 여사는 중국방문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며 미국 젊은이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각과 창조에 접근하게 만들었다"며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전날 성사된 중미 양국 퍼스트레이디의 첫 만남에 대해 '소프트 외교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미셸 여사의 민감한 발언들은 결국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 기류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마. 마·일 관계

● "오바마, 아베와 전화통화서 3국회담 제의" <교도>(3/2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 개최 결정에 앞서 이달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며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대화하고 싶다. 협력해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고 반응했고 당사가 회담 개최에 관해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시점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음.
- 통신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기회를 만들지 못해 고심하던 중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절묘한 측면 지원'이었다는 미·일 관계 소식통의 평가를 전했으며, 한일 양국 회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 미·러 관계

● <우크라이나 사태> 美-러 '추가 제재-보복 제재' 맞교환(3/21,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20일 서로 제재 명단을 주고 받으며 또다시 충돌했음.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 병합과 관련해 20명의 러시아인과 1개의 은행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제재 명단 발표와 관련 러시아는 지난 며칠간 국제 공동체가 거부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알렸듯이 러시아에 추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앞서 취한 1차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9명의 미국인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했으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미국의 명단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對日 개인청구권 존재' 입장 정리" <日신문>(3/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일제의 전쟁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민간인들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공식 견해를 처음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1일 보도했음.
 - 또한 신문은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럽 등 주요국들에 통보했으며, 머지않아 이 사항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음.
 -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심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는 만큼 법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판결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음.
 - 개인 청구권의 존재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갑자기 입장을 정한 것은 일본 정부와의 대결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넉케이는 분석했음.

아. 기타

- 정부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인정 못해"...성명 발표(3/19, 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음.
 -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일하나, 국제법 위반 등을 거론한 다른 나라에 비해 표현 수위 면에서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의 책임 등과 함께 대 러시아 관계 등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남·북·러 협력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대 러시아 제재 여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음.
- 일본-대만, 동중국해 어업분야 협력 확대(3/21, 연합뉴스)
 - 대만국가어업인협회와 일본어업협회는 20일 대만 북부 신베이에서 해상 수색 및 구조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1일 전했다.
 - 일본과 대만이 민간 분야에서 어업관련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측은 이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 어업 분쟁 처리와 해상 사고 발생 시 구조 협력문제 등을 논의함.
 - 일본과 대만은 지난해 4월 센카쿠 주변 12~24해리를 공동 관리 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간 어업협정을 타결한 바 있음.
 - 일본은 중국과 외교·군사적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만과의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어업협정 체결 당시에도 중국과 대만이 공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백악관 韓美日 정상회담, 동북아 안보확약 신호"(3/22,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가 두 나라는 물론 지역과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3자 간 공조,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이슈들에 대한 공조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스키 대변인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세 나라가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모든 전략적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통신, 성김 北인권 발언 비난…"누워서 침뱉기"(연합뉴스, 3.17)**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 인권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가'라며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수치스러운 인권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고 "미국은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했댜자 제 망신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김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남한에서 "미군의 폭행사건, 제3국의 공식문서까지 위조한 간첩조작사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범죄들"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김 대사가 이 사건들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음.
 - 성김 대사는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악(evil)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북한 인권 상황을 생각해보면 '악'이라고 표현한 것이 놀랍지는 않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북, 장마당 비료거래 일체 금지(자유아시아방송, 3.19)**
 -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비료거래를 일체 금지시킨데 이어 불법 비료 거래자들의 가택수색까지 단행해 폐기발 농사로 연명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신고자의 비밀을 담보해주며 일정한 대가도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음.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협동농장에 공급할 자재들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만포시 '농촌자재공급소' 소장과 '농촌수출원천사업소' 소장이 시 검찰소에 구류됐다"고 설명함.
 -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농촌에 공급될 비료와 디젤유를 몰래 빼돌려 장마당 장사꾼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런가하면 이들로부터 비료와 디젤유를 넘겨받은 장사꾼들도 모두 구속되고 가택수색까지 받은 것으로 보임.
 - 장마당들에서도 일체 비료를 팔지 못하도록 단속이 강화됐는데, 양강도의 소식통은 장마당 담당 주재원(담당경찰)들과 관리원들이 수시로 몰래 비료를 팔기도 하는 쌀 장사꾼들의 집을 뒤지고 있으며, 올해 2월 초에는 인민반 회의를 통해 몰래 비료를 팔다



적발 시 엄격히 처벌한다는 인민보안부 '경고문'을 모든 주민들에게 포치(하달)했다고 전함.

● "중국여행 갔다 온 평양시민 30여 명 관리소行"(데일리NK, 3.20)

- 북한이 지난달 '국가정보원 첩자'라며 체포해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1) 씨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연회를 열고 사상 교양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 한국 사람과 접촉했거나 기독교 교육을 받은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소환·조사하면서 평양에서만 30여 명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증언이 있음.
- 평양 소식통은 한국 선교사 회견 이후 연일 인민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의에서는 주민들에게 '불순한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교회(기독교)에 접촉하거나 이야기만 들어도 반혁명분자로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무조건 체포한다는 엄포에 주민들은 움짱달짝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북한 당국이 사사(私事) 여행으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면서 평양 낙랑 구역에서 6명, 서성 구역에서 3명 등 총 30여 명의 일부 주민들이 한국 사람과 접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사상 교양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체제 이완에 대한 탄압을 나서기 위한 구실을 찾은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그는 "국경 경비대 교체와 손 전화 전파 탐지기 확대 등으로도 모자라 교회 관련 탄압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향후 주민 통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북, 종이 부족해 교육방식도 전환(자유아시아방송, 3.20)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뜻에 따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방식을 교과서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열악한 종이사정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당(노동당 중앙위) 과학교육부로부터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 교원들의 '교수안'도 모두 바뀌게 된다"고 설명함.
- 새로운 수업방법은 기존처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학습장(노트)에 필기하지 않아도 되는 '청강필독(聽講必讀)'식이며, '청강필독'식은 교원이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장이 따로 필요 없는 방식임.
-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방법은 수업시간에 교원이 불러주는 기본



내용을 학생들이 일일이 받아쓰고 외우는 '필기암기'식이어서 매 교과서마다 따로 학습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고 소식통은 강조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세계적인 교육방법을 따라가야 세계적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학습장에 쓴 내용만 졸졸 외우는 것은 잘못된 교육방법"이라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 내용을 전함.
-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교과서 위주의 교육방법을 "현 경제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현재 극심한 종이사정으로 '로동신문'조차 제대로 찍어내지 못 하고 있다"며 지적함.

● 북 특권층, 유치원부터 학군 따져(자유아시아방송, 3.20)

- 북한 특권층들이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유치원 때부터 학군을 많이 따지며, 특히 경상유치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방문이후 선호도가 높아짐.
- 개학을 앞둔 요즘 학군 좋은 평양의 유치원들에는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고위 간부들의 청탁과 요구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에 잠시 체류 중인 지모 주민은 평양 창광유치원, 경상유치원 등을 지목했으며, "평양 창광거리 일대는 중앙당 고위층이 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더 없이 좋다"고 설명함.
- 특히 김 제1비서의 현지도 단위가 되고, 또 중앙에서 놀이시설과 교구비품을 일식(일체)으로 갖춰진 경상유치원에는 노동당 간부와 노동신문사 기자, 중앙병원 의사 자녀들이 대부분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창광거리와 창전거리 일대의 주택아소, 주유치원에서는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군을 노리는 돈 많은 사람들까지 몰려들면서 주택 가격이 다른 데 비해 두 배 높게 들썩이고 있음.
- 또한 이곳은 영재학교인 금성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고위층 자녀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권층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교육조건과 놀이시설을 갖춘 '김정숙 탁아소'와 '창광유치원', '경상유치원'을 외국인 관광코스로 정하고 외부에 개방하고 있음.

● 北 신문, 美 인권보고서 비난..."부당한 내정간섭"(연합뉴스, 3.23)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규탄배격당하는 인권재판관의 가련한 몰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해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중국, 이란, 이집트, 알제리 등 많은 나라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사가 주권 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 지적함.
- 또 "미국이 인권모략소동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를 미국 자신이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북한인권

● 커비위원장 "국제사회 즉각 北인권상황 개선해야"(연합뉴스, 3.17)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인권위 회의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일의 나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와 비교하며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나설 것을 촉구함.
-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나치와 크메르루즈 등 이후로) 21세기에 또다시 충격적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를 차단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이 이번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커비 위원장은 "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 등을 당한 수백 명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면서 "인터넷에도 올라있는 이 보고서를 북한 주민은 접근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 이냐"면서 일축함.
- 또 북한을 직접 겨냥해 "사회적 인종차별인 성분' 시스템을 폐지하고 개인 우상화나 선전에 투입하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없애는 곳에 먼저 사용하라"면서 ▲강제납치된 사람들의 현황 ▲이산가족들의 편지와 전화 왕래 등을 주문했음.
- 아울러 "중국 역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데 회원국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



법재판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유엔 인권위에서 北대사 항의 퇴장(연합뉴스, 3.17)

-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 과정에서 항의 퇴장하는 등 회의장에 참여한 대결 분위기가 연출됨.
-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설을 하고 이어 보고서에 대한 각국 대표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순서로 짜여짐.
- 가장 먼저 이루어진 커비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중국은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범법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한 북한 인권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북한 서세평 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요 뭐요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를 어찌보려는 망상으로서 가소롭지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우리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인정 조차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한국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보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밝힘과 동시에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촉구했음.
- 이후 로버트 킹 미국 인권대사를 비롯 유럽연합(EU), 프랑스, 아일랜드, 베트남, 포르투갈 등의 대표들은 보고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즉각적인 보고서 이행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보고서 내용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
- 일본의 발언 차례에서 오카다 다카시(岡田隆)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발언권을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6)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에게 넘기자 즉각 북한 측은 유엔 인권위 대표도 아닌 민간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항의하고 나서면서 발언이 잠시 중단됐고, 인권위 측은 일본 대표단 명단에 이즈카 대표도 들어 있어 발언권을 줬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음.
- 이에 서세평 대사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엔 인권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북한 제네바대표부 직원들도 함께 퇴장했으며 북한에서 온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 등 몇 명만이 자리를 지킴.

● 中, '나치독일 비유' 유엔 北 인권보고서 일축(뉴시스, 3.17)

- 중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나치 독일 때와 비교한 유엔 보고서를



일축했다고 BBC가 17일 보도했음.

- 제네바 중국대표부 천촨둥 외교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보고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밝혀 향후 중국이 추가 대응에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유엔 보고서의 일부 권고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힘.
- 천 외교관은 이날 유엔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지원과 협력을 받지 못한 COI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함.

● **인권위 "국제사회, 유엔 北인권위 권고 이행해야"(연합뉴스, 3.18)**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18일 오전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북한주민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함.
- 현 위원장은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COI 권고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중국,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에 거부권 시사(연합뉴스, 3.18)**

- 중국 정부는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통과를 거부권을 통해 저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인권 문제에서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평등 및 상호 존중의 기초하에서 건설적인 대화로서 인권 영역의 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됨.



● **한국 국가인권위, 5월 베를린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미국의 소리, 3.18)**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5월13일 독일 베를린에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에는 COI 조사단의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보호 방안과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인권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임.

● **영국, 강력한 대북인권 결의 지지(자유아시아방송, 3.18)**

-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Sayeeda Warsi) 선임부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권고에 따른 영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데이빗 엘튼 의원의 상원 대정부 질문에서 영국 정부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 엘튼 의원은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기관에 책임자를 제소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 재질 의함.
-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대북 인권 결의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영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에서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강제북송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
- 캐롤라인 콕스 의원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국어 방송 개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했으며,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인 BBC 방송국이 검토 중이라고 응답함.

● **베트남, 북한 인권문제 언급...존재감 과시(연합뉴스, 3.19)**

-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북한의 인권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 19일 베트남 일간지 푸오이쩌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HRC)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 응웬 쑹 타잉 제네바 주재 베트남 대사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진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과 다른 한반도 제반 현안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국제사회가 여성과 어린이 등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교육, 보건 등 인도적인 문제 해결에 당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일본 도쿄를 방문한 쓰영 편 상 베트남 국가주석도 지난 18일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美 하원, "北 인권청문회 개최 예정"(노컷뉴스, 3.20)**

- 미국 하원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공식 제출한 데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의회 소식통은 19일 "이를 위해 스티브 쉐벗 위원장이 주도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증인 물색 등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고 밝힘.
- 소식통은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평화재단,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전문가포럼 개최(뉴스천지, 3.20)**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66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은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대상이며 그 접근법과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통일준비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림.
- 평화재단은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성찰해 볼 때"라고 밝힘.

● **영 의회, 북 인권 동의안 초당적 지지(자유아시아방송, 3.20)**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이달 들어 영국 하원에 2건의 동의안이 제출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음.
- 영국 하원에 지난 13일 제출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동의안(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EDM 1184)'에 일주일 만에 하원의원 20여 명이 지



- 지서명을 함.
- 본 동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알리고 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하원의원들의 동참을 얻기 위한 동의안임.
 -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인권유린 자료를 수집해 기록할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짐 세넨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이라는 제목의 동의안(EDM 1143)을 제출했으며, 20일 현재 하원의원 3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
 - 동의안은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가공할 만한 인권 유린의 범죄와 기독교인 박해 등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관련 사항을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 국무부 '북한인권 개선 압박 추가 조치 고려'(미국의 소리, 3.21)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서화 할 현지 장치 설립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촉구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이 장치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 활동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힘.
 - 사키 대변인은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기대를 표명함.
- 일본-EU, 北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연합뉴스, 3.21)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음.
 - 결의안은 고문과 납치, 시민 박해 등을 열거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납치 피해자를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 등 인권침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음.
 - 이와 함께 북한 최고 지도급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反)하는 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책임 추



- 공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함.
-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구체적인 기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음.
-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8일까지인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정기 회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3. 탈북자

- 노트북 배터리에 필로폰 넣어 수입한 탈북자 '실형'(연합뉴스, 3.17)
 -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탈북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됨.
 -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힘.
 - A씨는 앞서 실형을 받은 B씨와 함께 캐나다에 사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수입하기로 모의,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노트북 배터리 속에 필로폰 30g을 숨겨 공항으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음.
 -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이어 "특히 피고인은 폭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며 탈북자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공범 탈북자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했음.
- 대전지검 '새터민 지원센터' 운영(YTN, 3.17)
 - 대전지방검찰청이 지역 내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 '새터민 상담 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함.
 - 지원센터는 대전지검 1층에 마련되어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며, 대전 서구에는 새터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공부방도 열어 방과후 공부도 지원할 계획임.
- 北, 미주 탈북여성 비난 동영상 제작(세계일보, 3.17)
 - 북한은 이례적으로 뉴욕 맨해튼 북한대표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탈북자 인권운동을 벌여온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 한



명을 겨냥한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며 마 대표가 주장하는 이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함.

- 16일(현지시간) 유튜브에는 북한 국제방송인 '조선의 소리'(VOK) 이름으로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는 제목의 7분45초짜리 동영상이 올려져 있음.
- 동영상은 마 대표의 미주 활동을 궁금하게 여긴 해외동포 청취자한테서 사연을 접한 취재진이 마 대표의 행적을 잘 아는 이웃과 마 씨가 북한에서 처형당했다고 밝힌 전 남편 최광철 씨, 1989년 입수경 씨 방북 기간 내내 임씨를 동행한 김숙령 씨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음.
- 동영상은 "지금 미국 교포사회에 마영애라는 여성이 나타나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그동안 마 대표가 소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동영상에 출연한 마 씨 이웃은 "원체 생활이 너절하고 제 몸치장이나 하고 험잡이나 치는 그런 여자"라고 말했으며, 조선인민군예술단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담당 파견관으로 일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음.
- 북한에서 처형됐다는 전 남편 최광철은 "조선인민내무군 중좌(한국 중령급)로 복무하고 있다"면서 "이런 역겨운 인간, 양심도 의리도 없는 인간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환멸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 가정을 이뤘다"고 말했음.
- 마 대표는 1999년 중국으로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5년 북한 관련 강연 등 이유로 여권을 압수당하자 미국 망명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청받기도 함.

● **탈북자 구출기금 8888달러 모아(미주중앙일보, 3.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워싱턴협의회가 탈북자 구출기금 8888달러를 14일 북한 인권개선 청년단체인 NAUH(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에 전달함.
- 이번 기금은 지난 8일 한빛지구촌교회에서 열린 '탈북자를 위한 일일차집'을 통해 모은 것임.
- NAUH는 이번 기금을 통해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 4명 정도를 한국으로 탈출시킬 계획임.

●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 "北, 비열한 인신공격"(연합뉴스, 3.18)**

- 미국에서 탈북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영애 미주탈북자선교회 대표는 17일(현지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자신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탈북자 사회를 분열시키고 비열한 인신공격을 시도하는 북한과 중북세력을 규탄한다"고 밝힘.
- 마 대표는 "미국내 중북세력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일부 탈북자들



이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정부, 탈북자 자립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탈북자 토론회(뉴시스, 3.18)**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자립·자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고 편성에 있어 탈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또한 탈북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통일부가 직업훈련기관의 자격 여건을 갖춘 탈북자 단체 등에 직업훈련교육 용역을 맡길 것을 제안함.
-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한창권 회장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인원과 사업 선정비율도 탈북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
-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는 "탈북자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선 살아갈 수 없다면서 제3국으로의 이탈이 늘고 있다. 재탈북을 하는 셈인데, 아직 통계조차 없다"면서 "탈북자를 통일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지적함.

● **장하나 "안행부, 탈북자출신 공무원 특정업무 배제 지침"(뉴시스, 3.20)**

- 안전행정부가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특정업무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됨.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지난해 2월13일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탈북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의 직무배제' 지침을 하달한 공문을 입수했다"며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간첩사건' 후속조치로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탈북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 변경조치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6명의 탈북자가 보안업무에서 배제 또는 접근제한조치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명의 직무가 변경됐다. 경기도도 6명의 탈북자공무원이 접근제한을 비롯한 특별조치를 받았다"고 밝힘.
- 장 의원은 "이 같은 업무배제 조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포용하겠다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신상정보를 빼돌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순적이고 차별적 조치라며 안행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함.



- **경기도 탈북여성 보육교사·간호조무사로 양성(연합뉴스, 3.20)**
 - 경기도는 20일부터 탈북여성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15명이 1년 간 보육지식과 아기 돌보는 기술 등을 교육받게 됨.
 - 도는 2010년부터 탈북여성 자립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탈북여성 간호조무사 양성과정도 운영할 계획임.

- **경찰청-민주평통, 탈북자 지원 MOU 체결(뉴시스, 3.21)**
 - 경찰청은 21일 오후 3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힘.
 -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중앙 및 지역조직간 협력체계를 구축, 탈북민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업은 ▲탈북청소년 멘토링 ▲법률자문지원 ▲취업지원 ▲장학지원 ▲의료봉사 사업 등 5개 분야임.

- **남북하나재단-김앤장, 탈북자 법·제도 개선 MOU(뉴시스, 3.21)**
 - 남북하나재단과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는 21일 오후 재단 소강당에서 공익법률활동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재단과 김앤장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자문,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익소송의 대리 및 수행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함.
 - 이번 업무협약은 통일을 준비하는 '착한(着韓·대한민국에 정착)' 협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재단은 설명함.
 - '착한 협업모델'이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국내외 역량 있는 기관의 남북통합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발굴,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 필요에 접목한 새로운 모델
 - 정옥임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고, 역량 있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해 준다면 사전 준비와 시행착오를 통해 통일 이후 벌어질 사회통합 문제와 통일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외손녀 만난 北피랍 메구미 부모 "딸 행방 안 물었다"(연합뉴스, 3.17)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가 외손녀 김은경(26) 씨와 만난 자리에서 메구미의 행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함.
 -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와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14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뤄진 메구미의 딸 김은경(26·가명 김혜경)과의 만남에 대해 말함.
 - 이들은 외손녀와 만나는 동안 납북된 딸 메구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따로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 상봉 장소에는 김은경 씨 외에도 그의 남편과 지난해 5월 태어난 딸도 함께 자리했다고 요코타 씨 부부는 덧붙였다.
 - 교도통신은 일본과 북한 당국자가 이달 초 중국 선양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요코타 씨 부부와 김은경의 만남에 합의했으며, 이번 상봉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양국간 대화 재개에 물꼬를 텃다고 설명함.
 - 아베 총리는 17일 면회 성사에 관해 "매우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며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면회)실현을 위해 노력을 거듭했다. 납치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日 정부 "납북자 전원 귀국해야 대북 지원 가능"(연합뉴스, 3.18)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각료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제재 등과 관련,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커녕 한 푼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날 관계 각료회의는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가 10~14일 몽골에서 메구미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 김은경(26)씨와 첫 상봉을 한 것과 관련, 앞으로 북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열림.
 - 그는 특히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가 열리는 데 대해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을 돌려주는 것이 (북일문제 진전의) 대전제라는 기본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전력을 다해 하루빨리 납치 피해자 전원을 귀국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납치,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 **아베 "면회성사, 北 납치문제 해결 실마리로"(연합뉴스, 3.19)**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와 요코타의 딸 김은경씨가 최근 몽골에서 면회한 것과 관련해 "이런 변화에 근거해 납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싶다"고 발언함.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이전에는) 북한에서의 면회를 강하게 고집했으나 이번에는 북한 이외에서의 면회를 양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강하게 비판한 유엔 보고서에 관해 "납치 문제를 국제 사회가 함께 인식하게 됐다"며 "(북한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도 6.25 납북피해자 신고기한 연장(뉴시스, 3.19)**

- 제주특별자치도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기한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납북 김영남 어머니 "나도 손녀 보고 싶다"(연합뉴스, 3.20)**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가 외손녀 김은경(26)씨를 만났다는 소식에 은경씨의 친할머니인 최계월(90·전북 전주시)씨는 "나도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손녀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다.
- 최 할머니는 2006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28년 만에 모자상봉을 했고 동석한 은경씨도 함께 만남바 있음.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납북자 가족이 최 할머니처럼 가슴을 졸이며 평생을 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함.

● **6.25 납북자 가족들, 제네바 북한대사관 앞 시위(미국의 소리, 3.20)**

- 한국의 민간단체인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단은 19일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 중 납북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 시위를 벌임.

-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등 불성실하고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음.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대사관 측의 무반응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 한글 번역본을 대사관 우체통에 넣고 시위를 마쳤다고 말했음.

● **북한-일본, 30~31일 베이징서 정부 간 공식 협상(연합뉴스, 3.21)**

-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 일본이 오는 30~31일 베이징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한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장급 협상에는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예정임.
- 교도통신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나 행방불명자 문제에 관해 협상의 진전을 이루는 대신 일본에 경제 제재 등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일본 측은 납북자에 대한 재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나, 북한 측은 납치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통일부, 현단계 대북 비료지원 신중 입장 확인(연합뉴스, 3.17)**

- 통일부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최근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를 거론하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음.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5·24 조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품목, 비료나 쌀이나 이런 품목은 안 된다는 성격이 아니다"면서도 "(비료 지원은) 전반적으로 5·24 조치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또 "당국 차원의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CFK, 평양 결핵 연수원 4월 완공(자유아시아방송, 3.18)**
 - 미국 비정부기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주말 평양 결핵 연수원(Pyongyang TB Training Center) 완공을 위해 평양에 전문가를 파견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결핵 연수원은 오는 4월 초에 완공될 예정임.
 - 이번에 결핵연수원의 완공을 위해 방북한 전문가들은 11명의 기술자와 관계자이며, 미국인, 노르웨이인, 그리고 호주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결핵연수원이 완공되면 결핵 치료와 예방과 관련해서 북한 의료진과 연구진을 교육, 양성하게 됨.
 - 이번 방북에서는 평양 결핵 연수원 완공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북한 내 중앙결핵예방병원 실험실에서 북한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온실 사업, 간염 사업 등 평양 외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점검하고 올 예정임.
- **<정부, 대북 비료지원 제동...민화협 "반출신청할 것">(연합뉴스, 3.19)**
 - 정부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 추진에 좀 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포럼의 특강을 마친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최근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아니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특별히 호전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민화협의) 비료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함.
 - 정부의 경고음에도 민화협은 대북 비료 지원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만t) 보내기 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해 이미 7만7천 포대분의 돈을 모았음.
 - 민화협은 우선 비료 10만 포대를 살 돈이 모금되는 대로 통일부에 정식으로 대북 반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북측 상대 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에 비료 지원 구상을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벨기에 NGO, 북한 장애인 사업에 110만 달러 지원(미국의 소리, 3.19)**
 - 국제 구호 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벨기에 지부는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 상당의 지원 계획을 밝힘.



- 이 단체는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 (KFPD)'과 협력해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이 단체의 도미니크 델비그네 (Dominique Delvigne) 대북사업 담당관은 북한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 특히 세 가지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첫 번째는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 (KFPD)과 협력해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이를 위해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지역협회 결성을 지원하고 지역장애인협회의 활동을 도울 계획임.
 - 두 번째 주력 사업은 재활치료 사업으로, 현재 평안남도 덕춘 탄광병원과 평안북도 동림의 노인, 장애인 요양원, 함흥 정형외과병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세 번째 사업은 '특수장애인학교' 교육 개선 사업으로, 이 단체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임.
 -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캐 NGO, 내주 콩우유 분배 확인차 방북(자유아시아방송, 3.19)**
 - 캐나다의 민간단체 퍼스트스텝스(First Steps)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원품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 강원도와 평안남도의 사업장에 분배감시단을 파견해 분배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퍼스트스텝스 관계자는 수잔 리치 대표와 후원자로 구성된 4명의 방북단이 다음 주 북한으로 향하며 배편으로 보내지 못한 아기우유 등 지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리치 대표 일행이 강원도 원산, 통천, 남포, 형제산, 그리고 평안남도 덕천 지역의 고아원, 탁아소, 식품 공장, 진료소 그리고 미량영양소를 포장하는 설비를 보낸 곳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임.
 - **민주당 "민화협 대북 지원사업...조속히 허용하라"(국제뉴스, 3.20)**
 -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20일 오전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민화협이 추진 중인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허용하라"고 주장함.
 - 한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할 통일부가 계속해서 제동만 걸고 있다"고 덧붙이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비료지원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을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비료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 또한 "통일부는 2014년 업무 계획의 하나로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정해 '온실, 농축산 자재 등을 지원하고 공동영농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료지원의 즉각 허용을 요구함.

● 민화협, 정부와 '시기 맞춰' 대북 비료 지원할 것(국민일보, 3.20)

- 북한에 대규모 비료지원을 하기로 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정부의 반발에 조율 입장을 밝혔음.
-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0일 민화협 홈페이지에 "비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아니나 다만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기가 왔다'고 하면 즉각 농사철에 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와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 민화협은 전날까지 류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비료 10만 포대를 살 돈이 모금되는 대로 반출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민화협 의장단 등 회원단체 사이에서 정부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자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
- 민화협은 기존의 모금 운동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정부와 조율이 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 재미 한인 의사들, 5월 의료 지원 방북(미국의 소리, 3.20)

- 재미 한인 의사들이 5월 초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열리는 의학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현지 환자들을 진료할 계획임.
- 미국의 한인단체인 '조미의학과교류촉진회' 박문재 회장은 오는 5월3일 20여 명의 의사들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말함.
- 방북 의사들은 지난 1999년 시작돼 올해 16차를 맞는 의학과학도론회에 참가해 전공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치료 성과 등을 발표할 계획임.
- 이후 5명의 이민 1세 의사들은 평양외과대학 병원, 제3인민병원, 김만유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찰하고, 20명가량의 이민 2세 의사들은 수술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함.
- 올해 방북단의 특징은 한인 2세 의사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점으로, 단체는 그동안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한인 1세 의사들이 고령화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한국계 의사들이 점차 대를 잇는 추세라고 설명함.

8. 북한동향

- 駐韓美 대사(성김)의 '北 인권' 관련 발언(북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럽



다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했잖아 제 망신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인권범죄대국으로서의 제 흉상부터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비난(3.17, 중앙통신/미국의 수치스러운 인권 자화상)

* '미국의 총기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부패한 사회제도가 낳은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누구의 인권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저들 내부의 인권문제에나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3.17, 평양방송/인권유린의 왕국에서 올려나오는 비명)

● 日 문부과학성 부상의 '고노담화 부정' 관련 "일본의 과거침략사와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강짜를 부린다고 범죄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3.18, 중앙통신·노동신문/역사를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다)

* 최근 미군 비밀해제 문서 내용(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로 운영)을 거론하며 '일본군이 여성들을 군수물자처럼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의 조직적으로 감행된 특대형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3.18, 중앙통신/지울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일제의 성노예범죄)

● 12년제 의무교육제(2012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법령 발표) 실시 등 여러 가지 법령 발표를 거론하며 '당과 국가가 인민적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선전(3.20, 중앙통신/조선의 인민적 시책들)

● 美 국무성이 발표한 「2013년 나라별 인권보고서」 관련 '저들의 인권 허물을 가리우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일삼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비난(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성 김 주한 美대사의 '北 인권' 발언(北의 인권상황 개탄스럽다 등) 관련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중상모독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3.21, 평양방송/인권유린 왕초의 가소로운 인권타령)

● '일제의 과거범죄는 국제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 봤자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과거사 인정 및 사죄와 배상' 촉구(3.22, 중앙통신·노동신문/역사왜곡 행위로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

* 중국 할빈 731문제 국제연구센터가 공개한 '2차대전시기 일본군 73



1부대의 세균전 만행 자료' 소개 및 '과거청산' 촉구(3.22, 평양방송/일제의 세균전 죄행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